

## 두 번의 경제위기와 실업, 노동빈곤, 그리고 젠더: 한국 자살 위험양식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시론

문 다 슬\*·정 혜 주\*\*

### 요약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키고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자살율, 경제위기, 실업, 노동빈곤, 젠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PLUS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석박통합과정, 제1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PLUS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및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 관리학부, 교수, 교신저자

## 1. 들어가며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WHO, 2014). 한국은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그보다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송인한, 2018). 2004년과 2009년 이미 5개년 계획을 단위로 한 제1차 및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기 때문이다. 자살 예방법에 따라 2014년에 발표되어야 했던 제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그 2년 뒤인 2016년에 발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제1, 2차 종합대책 시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증가하던 자살률이,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부재했던 시기에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자살 예방 대책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이상영, 2015).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13년 동안 꾸준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sup>1)</sup>, 더욱이 OECD 국가 평균자살률이 지난 약 30년간 하향 추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2013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자살률이 감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인 12.1명에 비해 2.4배 높으며, 2위인 헝가리(19.4명), 3위인 일본(17.6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계속 높은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살예방 종합대책 및 자살예방법과 그 효과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자살예방 정책 및 사업범위, 거버넌스, 추진체계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박민서와 유영직, 2013; 원시연, 2011; 이상영, 2015; 이채정과 김양우, 2013). 그러나 자살예방책 평가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한국의 높은 자살율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김명희, 2012). 자살의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질 때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 논의는 물론 기존 자살예방책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자살률에 대한 이해는 자살률이 경제위기 시기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합의에 기초한다(최용환, 2011; 이윤정과 송인한, 2015). 1997-1998년 IMF 시기에 맞물려 급증한 자살률은 경제위기의 효과로 이해되었고, 그로부터 10년 뒤 발생한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자살률이 다시 한 번

1) 2018년 9월 현재 2005년 이후 처음으로 2위로 순위가 내려왔지만, 이는 자살률 감소의 결과이기 보다는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가 OECD에 새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급증하면서 경제위기는 한국의 자살률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경제 위기 시기 자살위험 발생 양식과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국내 연구는 실업, (상대적) 빈곤, 양극화/소득 불평등 등에 주목한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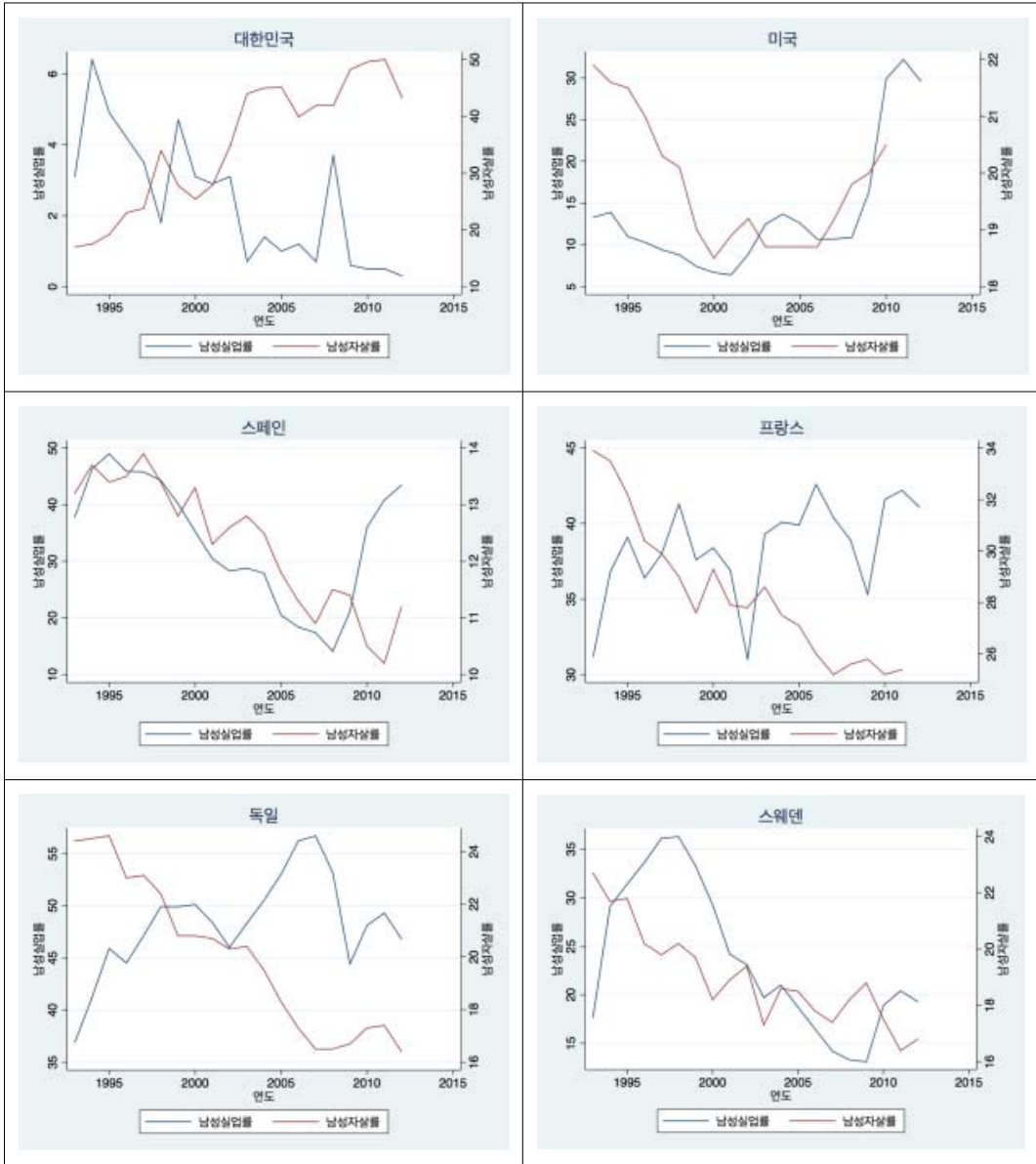
## 1) 자살, 실업, 젠더에 관한 두 가지 미스터리

실업은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표 1]에 나타난 한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남성 총자살율과 총실업은 반드시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에서는 자살율이 실업율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스페인에서는 실업율 변화에 따라 자살율이 약간 뒤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실업율보다 자살율이 먼저 증가한다. 자살율과 실업율이 따로 움직이는 국가와 함께 움직이는 국가간 차이는 그 원인을 주로 사회보장으로 설명한다(Norström & Grönqvist, 2015). 즉, 강력한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적 수단을 통해 실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전자에서는 실업의 자살에 대한 영향이 상쇄되어 둘 사이의 연관성이 분리(decoupling)된 반면, 후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실업의 영향이 고스란히 자살율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에서 보듯 한국에서는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위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의 실업-자살율 미스터리이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미스터리는 경제위기 시기의 성별 자살율의 비를 보여주는 [그림1]에 있다. 그림에서 보듯, 한국은 남성자살율을 여성자살율로 나눈 남녀 자살율 비가 OECD에 비교하여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여성자살율이 높은 사회이다. 그 변화를 보면 한국에서 1997년 경제위기 시기에 남녀 자살률 비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그 값이 감소한다. 그러나 OECD 국가에서 1997년 금융위기는 그 영향의 성별차이가 거의 없었고, 2008년에는 오히려 여성 대비 남성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자살율과 2008년 경제위기 시기 여성자살율의 상대적으로 큰 증가, 이것이 한국 자살율의 두 번째 미스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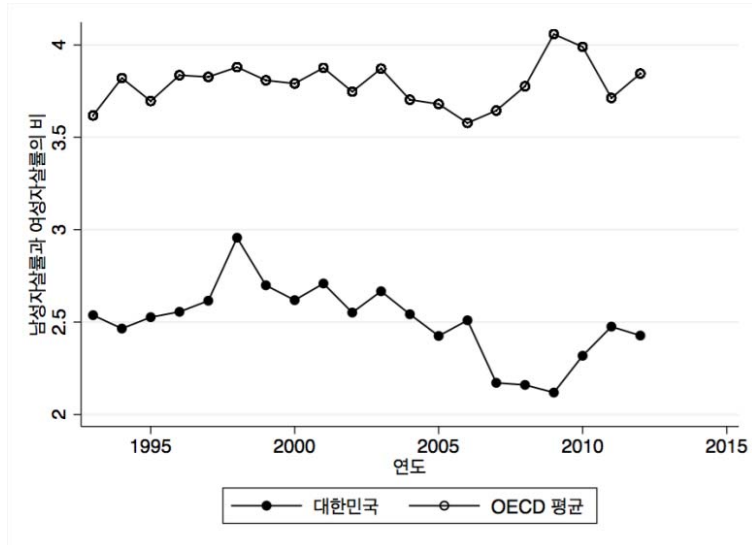
2) 구체적인 연구 동향은 백인립과 김홍주(2014)를 참고

[표 1] 6개 국에서 남성 총자살율과 총실업율의 변화, 1993년-2012년



자료: OECD

[그림 1] 성별자살율의 비: 한국과 OECD 평균의 비교, 1993년-2012년



자료: OECD

## 2) 연구의 목적

필자들은 이 두 가지 미스터리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과 이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기존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를 파악하였다. 첫째, 경제위기와 자살률을 살펴 본 연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는다.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는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두 차례의 경제위기가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물론 두 시기의 정책대응도 서로 다르다(허찬국, 2009). 따라서 각 경제위기가 자살률 증가에 미친 영향과 그 메커니즘도 서로 다를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 편의 연구가 각 시기의 경제위기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차이를 확인하여 2008년 금융위기 보다는 1997년 외환위기가 자살에 미친 영향이 더욱 크다고 결론지었다(김민영, 정광호, 금현섭, 2011). 해당 연구는 각 시기별 경제위기의 서로 다른 효과의 크기를 보여줌으로써 자살 위험양식의 변화를 포착했다는 중요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효과 크기의 차이가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는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남성과 여성 자살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젠더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림1]에서 확인하였듯이 자살률 성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그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의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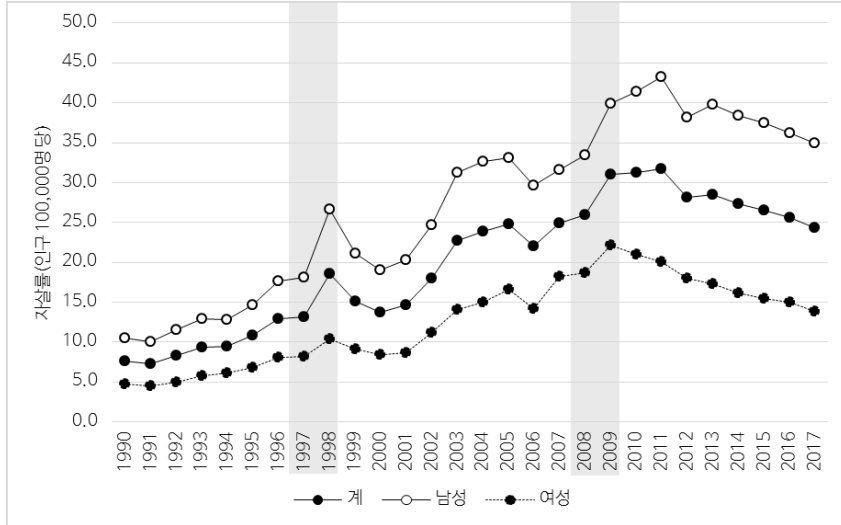
과가 서로 다른 집단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효과가 젠더 논의로 발전되지는 못했으며(배은경, 2009), 이는 경제위기의 자살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연구들은 남성의 더 높은 자살률과 경제위기 동안 남성 자살율이 여성 자살율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남성들을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강은정과 이수형, 2010). 이때에도 남녀 자살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만 기술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의 한계는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 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한다. 이 글은 새로운 통계분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 실증연구들이 축적해 온 근거를 종합하여 자살률이 급증하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별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다이내믹스(dynamics)를 젠더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한국의 자살률 현황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 자살률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위기시 급증하는 자살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기존 연구들이 놓치고 있는 자살률의 성비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두 번의 경제위기가 자살률을 증가시킨 메커니즘의 차이를 노동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배제 양상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논의와 지표를 함께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장기적 과제를 점검한다.

## 2. 한국의 경제위기와 자살: 현황

[그림2]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살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1997년과 1998년 사이,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가 자살률을 증가시켰음을 짐작 가능하다. 1998년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8.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4명, 2009년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명 증가하였다. 한편, 2002년과 2003년 사이에도 남녀 모두에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2.7명으로 전년도 대비 4.7명 증가하였는데, 그 수준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 시기 증가한 자살률과 비슷하다. 해당 시기는 2002년 정부의 신용카드사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조치의 결과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카드대란 시기로, 경제위기로 이해 가능하다(김민영, 정광호, 금현섭, 2011).

[그림 2] 우리나라 총인구 자살을 추이, 1990년-2017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표2]는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과 그 증가 정도를 보여주는 표이다. 여기에서는 경제위기 시기에 주목하여 여성과 남성의 자살률 증가 정도와 증가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2] 남성과 여성 전연령 자살율의 증감폭과 증감율, 1991년-2017년

구분 연도	남성			여성		
	자살률	증감	증감률	자살률	증감	증감률
1991	10.1	-0.4	-4%	4.5	-0.2	-4%
1992	11.5	1.4	14%	5.0	0.5	11%
1993	12.9	1.4	12%	5.8	0.8	16%
1994	12.8	-0.1	-1%	6.1	0.3	5%
1995	14.7	1.9	15%	6.8	0.7	11%
1996	17.7	3.0	20%	8.1	1.3	19%
1997	18.1	0.4	2%	8.2	0.1	1%
1998	26.7	8.6	48%	10.4	2.2	27%
1999	21.1	-5.6	-21%	9.1	-1.3	-13%
2000	19.0	-2.1	-10%	8.4	-0.7	-8%
2001	20.3	1.3	7%	8.7	0.3	4%
2002	24.7	4.4	22%	11.2	2.5	29%
2003	31.2	6.5	26%	14.1	2.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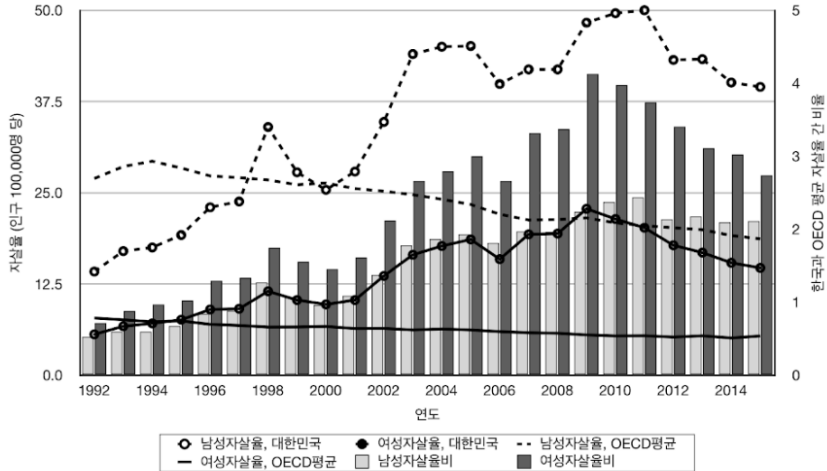
구분 연도	남성			여성		
	자살률	증감	증감률	자살률	증감	증감률
2004	32.6	1.4	4%	15.0	0.9	6%
2005	33.1	0.5	2%	16.6	1.6	11%
2006	29.7	-3.4	-10%	14.2	-2.4	-14%
2007	31.6	1.9	6%	18.2	4.0	28%
2008	33.4	1.8	6%	18.7	0.5	3%
2009	39.9	6.5	19%	22.1	3.4	18%
2010	41.4	1.5	4%	21.0	-1.1	-5%
2011	43.3	1.9	5%	20.1	-0.9	-4%
2012	38.2	-5.1	-12%	18.0	-2.1	-10%
2013	39.8	1.6	4%	17.3	-0.7	-4%
2014	38.4	-1.4	-4%	16.1	-1.2	-7%
2015	37.5	-0.9	-2%	15.5	-0.6	-4%
2016	36.2	-1.3	-3%	15.0	-0.5	-3%
2017	34.9	-1.3	-4%	13.8	-1.2	-8%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살률 증가 정도는 세 차례 모두 여성에서보다 남성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남성 자살률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26.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구 10만 명 당 8.6명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3년 카드대란 시기와 2008년 경제위기 시기에는 각각 인구 10만 명당 6.5명 더 자살했다. 절대적인 자살률은 2009년이 더 많지만, 전년도 대비 자살률의 증가폭은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가장 크고, 2002년과 2003년 사이가 그 다음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자살률의 경우 1997년에 비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8년 여성자살률(인구 10만 명당 10.4명)이 전년도 대비 인구 10만 명당 2.2명 증가한데 비해 2008년 여성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2.1명)은 전년도 대비 인구 10만 명당 3.4명 더 증가했다. 카드대란 시기 여성 자살률도 증가하였는데, 인구 10만 명당 2.9명 더 자살했다.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 증가율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2009년에 비해 1998년과 2003년에 전년도 대비 자살 증가율이 더 높다(표 2). 한편 여성과 남성의 자살 증감율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연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자살 증감율은 비슷하다. 두 경제위기 시기에 주목해보면 1998년에는 여성 자살 증가율에 비해 남성 자살 증가율이 약 두 배 정도 높았는데 반해, 2003년과 2008년에는 남녀 자살 증가율이 같거나 비슷하다.

[그림 3] 한국의 성별 자살률 추이 및 OECD 평균과의 비교, 1992-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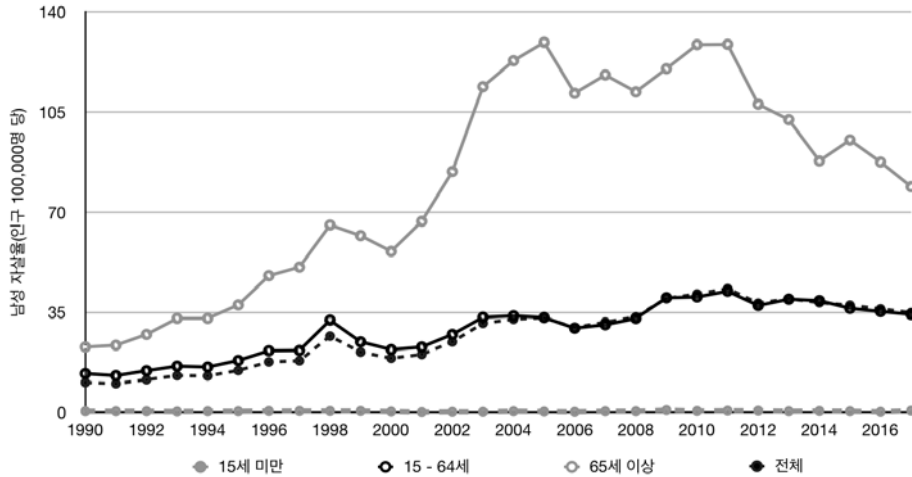


자료: OECD

[그림3]은 다소 복잡하지만 여성과 남성자살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한국의 자살율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높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여성자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검은 막대가 회색 막대보다 전구간에 걸쳐 더 높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OECD 평균 자살율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한 편 2003년 카드대란을 기점으로 남성과 여성의 OECD 대비 자살률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2008년을 전후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그림1]에서 한국 자살율 성비를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듯이 한국의 자살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OECD 평균과의 격차도 커진다는 점에서 특히 2008년 경제위기시기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자살이 남성 자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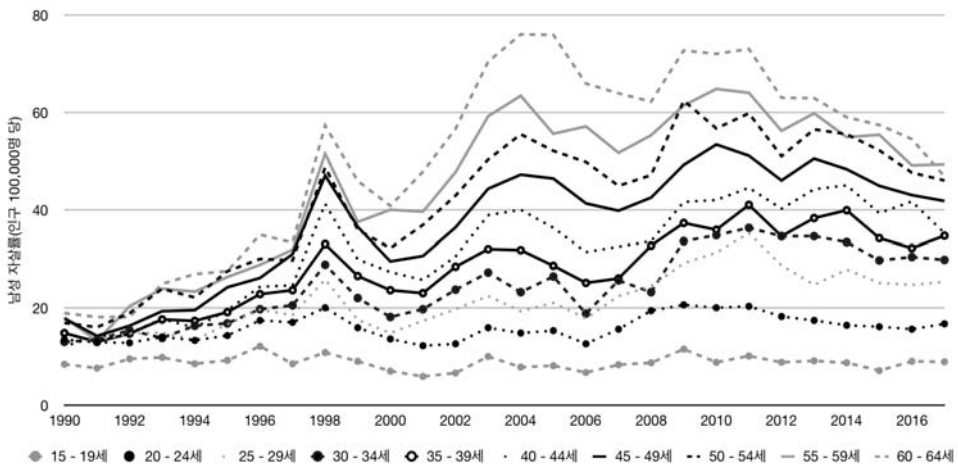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령별 인구집단에 따른 자살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 증가를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 결과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인구집단은 결국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전체 연령 자살률은 노동가능 연령 집단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그림4와 6). 노동가능 연령 인구집단을 다시 5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남성 15-64세 노동 인구집단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률이 증가한다[그림5]. 또한 연령 집단별 자살률 증가 패턴이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반복해서 확인하였듯이, 1998년, 그리고 2009년에 모든 노동 인구에서 전년도에 비해 자살률이 급증하지만, 그 정도 역시 청년층(15-34세)에 비해 중장년층(35-64세)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남성 자살률 추이의 연령별 비교, 1990-2017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5] 노동연령(15-64세) 남성 자살률 추이의 연령별 비교(5세 단위), 199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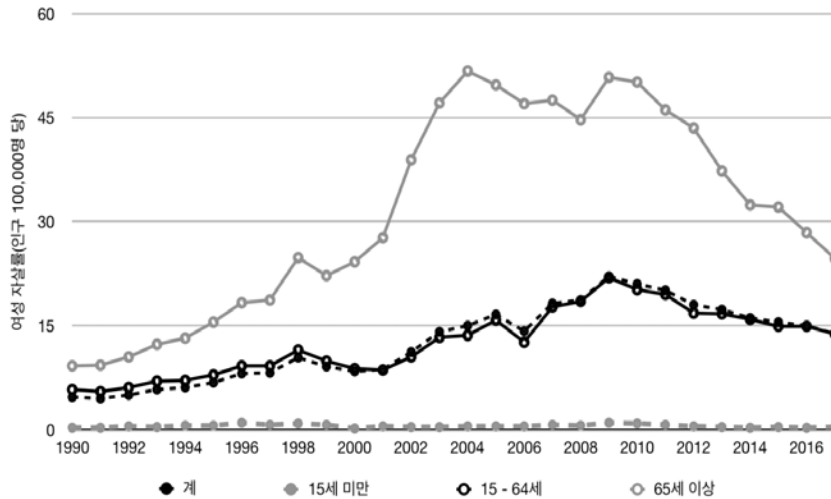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여성 연령별 노동 인구집단 자살률의 패턴은 남성의 그것과 다르다 [그림7]. 먼저, 남성과 달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살률 증가 패턴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기별로도 일관되지 않다. 먼저 여성 노동인구의 자살률 역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지점은 1997년과 2008년 연령별 자살률 패턴의 차이이다. 먼저, 자살률 증가의 정도가 1997년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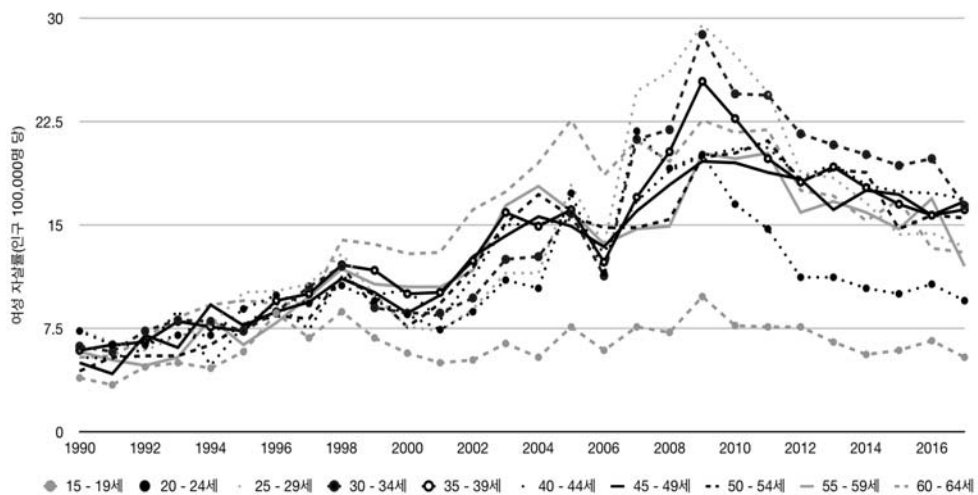
2008년에 크다는 점, 그리고 2006년을 기점으로 25세에서 39세 여성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 여성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하여 카드대란 시기 여성 노동인구에서는 전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여성 자살률 추이의 연령별 비교, 1990-2017년



자료: 통계청

[그림 7] 노동연령(15-64세) 여성 자살률 추이의 연령별 비교(5세 단위), 1990-2017년



자료: 통계청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별 자살률 현황을 통해 두 번의 경제위기와 카드대란이 우리나라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 증가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배제를 그 메커니즘으로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연령별로 자살률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2002-2003년 카드대란 시기 자살률의 증가는 다른 두 경제위기 시기 처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이전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자살률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전후 발생한 카드대란은 대외적으로 발생한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와 달리 대내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신용카드 업계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급작스럽게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국가보다는 개인 및 가계의 부채의 문제가 표면화되었다는 점(김민영, 정광호, 금현섭, 2011)에서 다른 두 시기와 큰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드대란 시기 발생한 자살률 증가에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사회적 배제와는 구별되는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논의의 중심에 두지는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 시기에 주목하여 자살의 위험양식 변화와 메커니즘을 논의할 것이다.

### 3. 자살의 위험양식 변화와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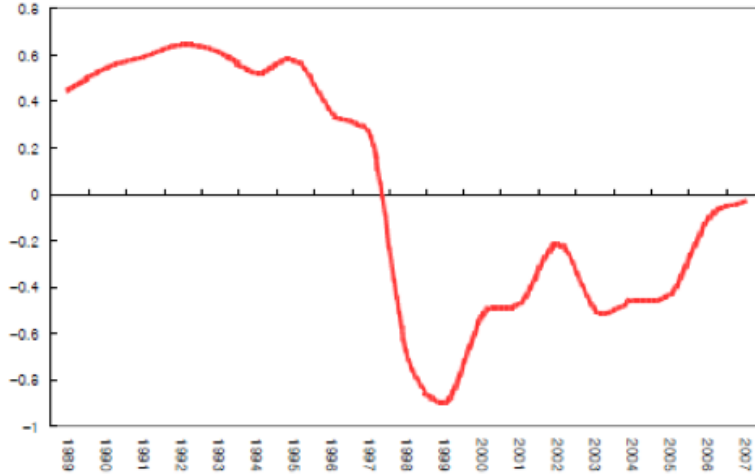
사회적 배제란 기존의 빈곤 패러다임에서 확장된 새로운 하나의 개념이다(Silver, 1994; 문진영, 2004; 이정우, 2009). 그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① 빈곤 개념을 넘어서는 포괄 범위와 ② 개인의 통제 가능성을 넘어서는 점에 초점을 두며, 따라서 ③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현상이므로 이를 통합하는데 있어 그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인식을 내포한다는 점을 공통적 요소로 갖는다(강신욱, 2006). 즉, 사회적 배제는 빈곤화의 동태적 과정과 그 다차원성에 주목한다.

다음 절에서는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 시기별 자살률을 설명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각각 실업과 노동빈곤을 제안할 것이다.

#### 1) 사회적 배제 양상의 변화

한국은 사회적 배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표를 개발하는 보고서(노대명 외, 2009)를 작성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차원을 8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차원이 한국의 사회적 배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8] 한국 사회통합 핵심지수의 연간 추이, 1990년-2007년



자료: 노대명 외(2009)

위 [그림8]에는 한국사회 통합핵심지수의 연간 추이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사회통합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까지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7년까지 외환위기 직전 수준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8개 사회통합지표가 사회통합핵심지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총량적 영향력<sup>3)</sup>과 방향별 영향력<sup>4)</sup>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분석기간이 짧은 가계대출을 제외하면, 고용불안과 교육비 지출부담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는 고용불안과 빈곤문제 순으로 영향력이 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용불안과 교육비 지출 부담 순이었다가 2003년 이후에는 가계대출, 교육비, 빈곤문제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3] 개별지표가 기간별 사회통합지수에 미친 총량적 영향력

	빈곤	소득격차	실업	고용불안	가계대출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기간 전체	13.73	13.71	10.33	15.45	18.47	15.22	12.76	13.93
1989-1996	14.78	14.60	11.26	16.40	-	12.01	15.16	15.80
1997-2002	8.57	10.25	15.27	18.96	-	17.32	12.85	16.79
2003-2007	18.26	16.46	2.91	9.73	18.47	17.86	8.81	7.50

자료: 노대명 외(2009)

3) 각 지표가 사회통합 핵심지수에 미친 영향력(Share)을 단순 합산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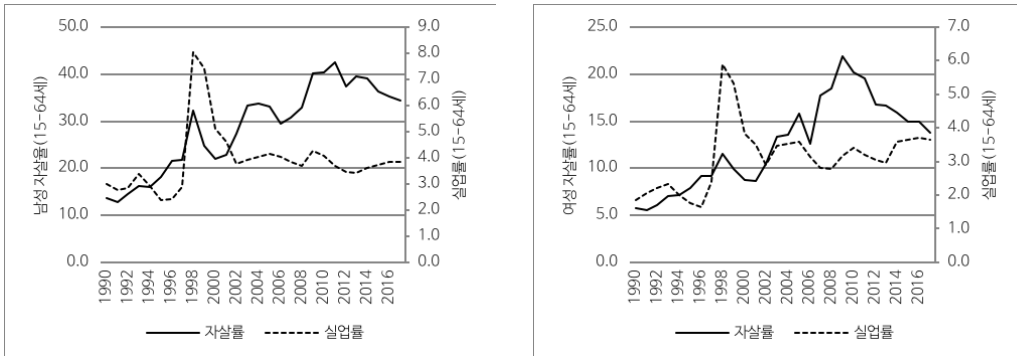
4) 각 지표가 사회통합지수에 미친 영향력을 방향(+/-)에 따라 구분하여 합산한 수치

전체 기간을 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빈곤과 고용불안, 주거비 과부담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시기별 개별지표가 사회통합지수에 미친 총량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표3]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큰 변화가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의료비 지출부담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거비지출 부담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외환위기 직후에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가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빈곤과 소득격차 문제는 외환위기 시기에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 실업과 고용불안 문제보다 빈곤과 소득격차 문제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이나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지 않으나, 이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노동빈곤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1997년 외환위기와 자살률: 실업 메커니즘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 시기 사회적 배제 양상은 실업과 고용불안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표4]가 보여주는 경제활동 연령(15세-64세)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실업률과 자살률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다. 실업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서도 자살률과 실업률이 큰 연관성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첫째, 1997년과 1998년 사이에는 실업률과 자살률이 함께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며, 둘째, 실업률과 자살률의 증가패턴에 남성과 여성 집단의 차이가 드러난다. 해당 연령 집단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실업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경제위기가 지나고 실업률이 감소한 1998년 이후에도 자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표 4] 경제활동인구 자살율과 실업률 추이, 1990년-2017년



자료: 통계청, OECD

1997년 경제위기시기 자살률의 급증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실업 및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로 설명이 가능하다.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배은경, 2009). 이는 IMF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견법 허용을 정부에 요구한 결과이다(차형석, 2017).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만들어진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후 지속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한편, 실업의 위험이 일상화 되었다(배은경, 2009). 특히 외환위기 직후 1998년 취업자 수가 127만 6,000명 감소하였고, 실업자는 연평균 149만 명까지 증가하였다(전병유, 2010). 즉, 시장 관계의 확대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호의 점진적 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수반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자살의 증가를 이끌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증 연구 역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실업률과 자살률의 관계를 살펴 본 실증연구의 결과는 일정하지 않은데, 이를 분석에 포함한 경제위기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이 자살률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2012년 6년간 실업률과 자살률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두 지표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최윤정과 박지윤, 2014). 1983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 경제위기 시기를 모두 포함한 함우식(2013)의 연구에서도 실업률과 자살률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실업률과 자살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박종순 등(2003)은 두 지표가 정의 상관관계를 유지함을 밝혔다. 윤우석(2011)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만 실업률과 자살률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점차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Chang 등(2009)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가 자살률을 증가시켰고, 특히 남성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시기를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살률의 관계를 살펴 본 강은정과 이수형(2014)의 연구에서는 특히 45세-64세 남성 자살률이 실업률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3) 2008년 금융위기: 노동빈곤(working poor)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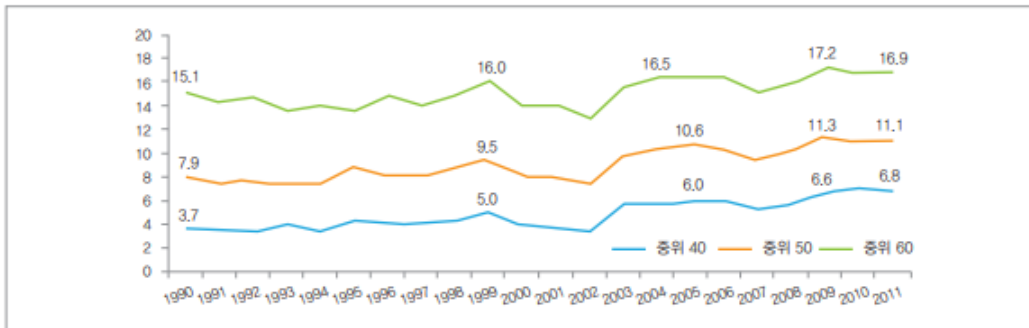
한편,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실업률과 자살률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표4).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는 실업자 수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취업자 감소폭도 외환위기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다(전병유, 2010).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자살률의 증가가 실업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자살률은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자살위험이 1997년 외환위기에 독립적이기 보

다는, 외환위기 이후 재편된 노동시장의 변화를 토대로 한다(배은경, 2009)는 사실을 반영한다. 1997년 경제위기 결과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시행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었으며(장규연, 2009; 이덕로, 2004)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1997년 재편된 노동시장은 중요하게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를 다양화시켰는데, 대부분이 짧은 계약 기간, 저임금, 제한적 노동권,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기존 상용직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였다. 일례로 1998년 이후 실업에서 취업으로 탈출한 이들에게 75%가 임시일용직이었다(전병유, 2010).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보다는 비정규직 규모 조정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수단을 사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노동시장 약자들의 실직과 빈곤위험이 높아졌고, 그 결과 노동빈곤 문제가 심화되었다(전병유, 2010).

[그림]의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동빈곤층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09년 노동빈곤층 즉, 소득이 중위 소득 50% 및 60% 이하인 비율이 각각 11.3%와 17.2%로 가장 높다. 노동빈곤층은 ‘일하고 있거나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빈곤층’을 의미한다(노대명, 2013). 노동빈곤층의 추이와 자살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빈곤층의 역시 두 차례 경제위기 시기에 증가하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의 효과로 1998년에 자살률과 실업률이 함께 급증한 반면, 노동빈곤층의 급증은 그 1년 뒤인 1999년에 목격된다. 즉, 1999년 발생한 노동빈곤은 자살의 원인이기 보다는 외환위기 결과 발생한 대량 실업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2008년에는 자살률과 노동빈곤층 증가가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다.

[그림 9] 노동빈곤층 비율 추이, 1990년-2011년



주: 1) 빈곤선은 제공근으로 균등화된 경상소득의 중위 값을 활용  
 2) 여기서 말하는 근로빈곤층은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의 취업빈곤층을 지칭  
 자료: 노대명(2013)

또 다른 한편으로, 법 외부에 존재하는 “방임된 외부노동시장”(정이환, 2010; 최선영과 장경섭, 2012에서 재인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실업의 형태로 가시화되지 않는 노동의 위험이 비공식적인 주변부 취업으로 은폐되어 왔다는 것이다(최선영과 장경섭, 2012).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식 노동시장에서부터 이탈한 이들 즉, 실업한 이들은 하청, 특수고용, 또는 영세자영업 등의 다양한 ‘자영업’의 형태로 노동을 지속해왔다(이주하, 2017). 이들 집단은 임금노동자에 비해 평균소득이 낮은 한편, 사회적 보호로부터도 배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빈곤과 자살률의 연관성을 살펴 본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노동빈곤과 관련된 지표와 자살률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그 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다. 근로능력자가 빈곤층의 절반을 차지하며, 빈곤층의 80%가 근로능력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이병희와 반정호, 2008)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 빈곤율과 자살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국민 전체 가처분소득 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 비율로 측정한 상대적 빈곤율과 남성과 여성의 자살사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할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자살률이 증가하였다(김동현, 2013; 백인립과 김홍주, 2014에서 재인용). 한편, 백인립과 김홍주(2014)는 기초자치단체별 빈곤 정도와 자살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부유한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판단 하에 빈곤 정도를 재정자립도로 조작화하여 자살률과 분석하였는데, 빈곤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은기수(2005)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시기까지 유의한 상관성이 없던 소득분배 지수(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및 소득 10분위 계수)와 자살률의 관계가 그 이후 시기인 1998-2004년에 유의미한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연구 가운데 하나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10년간(1998-2010년) 국내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해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자살률에 미친 영향을 6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소득불평등보다 ‘중산층 쇠퇴현상’을 반영하는 소득양극화 지표가 한 사회의 자살률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장지연과 신동균, 2010). 더하여 2007년부터 2012년 까지 자료를 사용해 지니계수로 측정한 지역별 소득불평등과 자살률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에서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최윤정과 박지연, 201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살률 증가는 실업보다는 노동빈곤화와 관련된 것이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편된 노동시장이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젠더 관점에서 바라 본 경제위기와 자살: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중심적 사회보장정책

위 [그림1]과 [그림3]에서 살펴본 두 차례 경제위기 시기 총자살을 성비의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1997년 경제위기의 부정적인 효과는 주로 남성에게, 2008년 위기의 효과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연령별 자살률 추이를 비교한 [그림4-7]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타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이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 자살 메커니즘의 차이를 가져왔을까?

각 경제위기 시기별 남성과 여성 자살 메커니즘의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남성중심적 사회보장정책을 함께 살펴볼 때 더욱 풍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부양자모델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강화된 사회정책에서도 남성을 주요 노동시장 참여자로 상정함으로써 여성들을 사회적 보호로부터도 배제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시 발생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남성을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자살위험은 경감시킨 한편,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여성들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이들의 자살위험을 남성의 그것만큼 감소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비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상대적으로 증가한 여성의 자살율에 좀 더 주목하여, 이러한 현상을 여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친화적 사회보장정책(김안나, 2006)의 결과로 이해하고자 한다.

##### 1) 여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실업자의 수도 단시간에 급증하였다(이병희, 2009). 특히 금융산업에 위기의 결과가 집중되었던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당시 경제위기는 금융산업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도 영향을 미쳤고, 대규모 구조조정은 대부분 상용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이병희, 2009). 한편,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여전히 남성이 주된 생계부양자로 역할하고 있었으며, 외벌이 가구가 전체 가구의 80% 이상을 차지했다(신경아, 2014; 배은경, 2009; 조순경, 1998). 뿐만 아니라 남성가구주 소득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까지 80%가 넘었다(신경아, 2014).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위기 시기 실업의 자살영향은 남성에게 보다 집중되었을 것이다. 실제 당시 실업률과 절대적인 실업자의 수는 대기업 상용직 남성에서 더 높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주로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집단에 집중한다. 즉,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공식에서부터 비공식 영역으로의 노동이동은 남성에게 보다 두드러지지만, 불안정이 가족의 맥락으로 전이되어 배우자 여성의 동반취업 또는 노동시장의 재참여를 유도했다(최선영과 장경섭, 2012). 즉, IMF 이후 1인생계부양자 모델이 와해되었고, 맞벌이 가구가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신경아, 2014). 해당 시기 노동연령 인구의 자살률 급증을 보여주는 [그림7]의 결과는 2008년 경제위기의 효과가 노동연령 여성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7]은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 증가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여성차별과 함께 1997년 위기가 가져온 변화의 누적된 효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연령 남성의 자살률 패턴은 연령별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안정적으로 보여주는데 반해 노동연령 여성의 자살률 패턴은 연령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시기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연령집단에서 자살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 해당 연령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경험하는데, 이 생애 과정에서 이들은 차별을 경험한다. 예컨대,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이들은 동일 연령대 남성에게 비해 낮은 월평균 임금을 받는다(유정미, 2017). 동일한 학력을 가진 남성들과 비교해서 고용률도 낮다(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2016). 노동시장 진입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한편,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이들은 남성에 비해 빨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한다(오은진과 김소연, 2016). 한편,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20대였던 ‘IMF 키즈’(안은별, 2017)이다. 이들 자살률은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는 결국 2008년 경제위기가 1997년 위기가 가져온 변화의 누적된 효과로 해석 가능하다.

경기변동과 고용 및 근로시간 조정패턴의 변화를 연구한 윤운규(2010)의 연구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탄력성은 1987년 중반부터 시작된 민주화, 노동조합 활성화 및 영향력 증대 등의 결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해당 시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분석 시기에서 여성들의 고용탄력성은 남성의 그것에 비해 높다(윤운규, 2010). 이는 생산변동에 따른 고용량 조정에서 여성이 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경제위기 시기에 고용량 조정의 위험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클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경제위기 전후 시기를 나누어 제조업의 성별 고용탄력성을 분석한 그의 연구 결과는 경제위기를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의 고용탄력성 변화 양상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의 고용탄력성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민주화 시기 이후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 감소하던 고용탄력성이 경제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초과근로시간 조정의 위협 역시 경제위기 이후에는 여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간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변화를 유형화한 민현주와 임희정(2010)의 연구를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여성들의 위협이 더욱 가시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는 11년간 ‘안정적으로 상용직을 유지하는 집단(22.8%)’, ‘지속적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22.0%)’, ‘지속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19.4%)’, 그리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집단(17.6%)’ 순으로 구성된다. 남성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실업의 위협이 심각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는 남성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여성의 경우 지난 11년간 안정적으로 상용직을 유지한 집단의 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여성들 가운데 11년 동안 지속적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 비율은 33.1%에 달했으며, 일용직이나 임시직에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한 집단도 12.1%에 달한다. 더군다나 이들 가운데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위를 반복하는 비중도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분절화를 통해 여성들을 노동시장 주변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높은 경제적 취약성을 유지하게 했다(금재호, 2002; 김안나, 2006에서 재인용). 그 결과 빈곤이 여성의 문제로 되어가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이 심화됐다(김안나, 2006). 여성가구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들의 소득은 남성가구주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를 가지는 데 실패하는 데에서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빈곤화 현상을 초래한다. 1996년 여성가구주 소득이 남성가구주 소득의 73.8%였다면 두 차례 경제위기 시기를 지나면서 2009년에는 67.4%에 불과해 소득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구주 내에서 소득격차도 더 벌어졌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1996년을 기준으로 5.4배였는데 2006년에는 7.4배로 약 37% 더 벌어진 것이다. 여성가구주 내 소득격차의 증가는 남성의 그것과 비교해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및 직장 내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큰 여성이 경제위기 위협의 완충요소(buffer)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윤윤규, 2010).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돌봄노동을 요구 받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김안나, 2006). 이들의 이중노동 부담은 여성들을 노동시장 내 열등한 노동력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차별 기제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을 계속해서 노동시장 주변부로 내몰았다(김안나, 2009). 뿐만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사라진 여성 정규직 일자리는 또 다른 여성들이 낮은 임금과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용역 등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 계약을 통해 메꿈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2008년 금융위

기의 위험까지 흡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여성차별적 노동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여성들의 노동빈곤화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했으며, 이는 해당 시기 여성 자살율의 증가를 설명한다. 다시 말해, 2008년 금융위기는 노동시장 주변부에 위치한 비정규직의 규모 조정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수단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그 영향효과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이들의 노동시장 지위와 경제상황은 보다 취약해졌으며,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을 것이다.

## 2) 남성중심적 사회보장정책

자살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적 보호 정책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위기와 자살의 관계를 살펴 본 국내외 연구들은 실업과 자살의 상관성이 사회보장 및 긴축정책의 효과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업수당의 대체율이 높을수록, 인구 1인당 지출하는 사회보장액수가 많을수록 실업의 자살율에 대한 영향이 줄어든다(Norström and Grönqvist, 2015). 실업과 자살의 상관성에 대한 사회보장의 효과를 살핀 또 다른 연구(Stuckler et al., 2009)에서는 1인당 미화100달러를 어떤 사회보장에 지출하느냐에 따라 실업의 자살에 대한 효과를 줄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지출하는 경우 0.38%, 가족수당은 0.23%, 보건의료는 0.07%, 마지막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실업급여로는 0.09%가 감소한다. 즉, 일반적인 사회보장과 그 중 한 예인 실업수당이 더 관대할수록 실업률과 자살율이 함께 증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SOPHIE 프로젝트에서 출판된 보고서(2015)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자살율은 실업률이 낮을수록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보호가 더 높은 나라에서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때 경기회복이 사망률에 가져다주는 우호적인 효과는 대부분 ‘긴축’에 의해 상쇄된다. 감소했던 사망률은 긴축에 의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동되고, 증가한 자살율은 더욱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불경기 시기에 관측되는 사회적 보장이 낮은 나라에서의 더 큰 건강악화는 일반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혹은 복지레짐의 효과라기보다는 불경기시기에 함께 일어나는 긴축 정책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중심적 시각에 반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일차적 분배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는 각국의 건강수준이 사회정책을 통한 2차적 분배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다(Safaci, 2015). 연구의 핵심

은 더 좋고 공평한 건강 상태를 위해서는 먼저 시장참여자들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시기 자살률의 증가는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1997년 당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이 야기한 대량의 실업과 이에 따른 빈곤화 문제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다(김태완과 전지현, 2009). 전병유(2010)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재했으며, 고용보험은 그 적용 대상자가 제한적이었던 한편, 실업부조 제도도 없었으므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사회안전망은 첫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임시 정책으로 보호하는 것과, 둘째 제도적 사회안전망을 확대 적용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정책적 대응은 제도화된 방식보다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고, 대상자도 정규직 실업자에 집중되어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했다(전병유, 2010). 한편 제도화된 정책인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외환위기 이후 수급 범위와 서비스를 확대했다(김태완과 전지현, 2009).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실업과 자살률의 상관성을 상쇄시킨 것으로 보인다. [표 3]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1997년 위기가 발생한 시기까지 사회적 배제에 큰 영향을 미치던 주거, 의료, 교육비의 비중이 2003년 이후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기초보장제도, 수당제도 확대 등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가속화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등의 위장된 자영업(Williams & Lapeyre, 2017)이 대량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정규직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김경혜, 2009). 특히 사회보험은 노동시장의 중심노동력을 구성하는 남성을 수혜자로 규정한다(박영란 외, 2003; 김안나, 2009에서 재인용). 하지만 노동시장의 주변적 노동력인 비정규직을 대다수 차지하는 여성들은 사회보험으로 부터 배제되는 한편, 자산평가에 기초한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되어 빈곤화가 더욱 가중된다(박영란 외, 2003; 김안나, 2009에서 재인용).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은 노동빈곤의 심화, 노동시장 이중화,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 등의 문제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의 위협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5. 나가며: 자살예방을 위한 전략

이 글은 경제위기 시기 급증하는 자살률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증가한 자살률의 메커니즘의 차이를 살펴 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두 차례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 증가 메커니즘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것과 달리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시기와 2008년 외환위기 시기 자살률 증가가 각각 실업과 노동빈곤이라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때 2008년 발견되는 자살의 위험과 그 메커니즘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편된 노동시장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남성 자살률에 주목하는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에 젠더관점을 통합함으로써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름을 보였다. 1997년 상용직 중심의 위험 발생에는 남성 자살률이, 2008년 노동시장 취약계층 중심의 위험 발생에는 여성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지막으로, 1997년과 2008년 두 경제위기 시기의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자살 메커니즘은 여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와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임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자살의 위험 양식과 그 메커니즘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성별 차이를 통해 자살의 원인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것이며, 한국사회의 자살률 문제는 결론적으로 1차 분배와 2차 분배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노력에 달려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함께 제안한다. 따라서, 자살예방 전략은 자살의 사회적 원인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 즉,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정신의학적 접근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자살은 사회 구조적이고, 의도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살예방 전략은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의학적 전략이나 감성에 호소하는 캠페인 등을 넘어서서 자살의 근본원인을 개선하는 데에 그 핵심을 두어야 한다. 즉,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인구집단 건강 관점(Rose, 2011)의 채택을 통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서의 일차적 분배를 개선하는 것, 만성적 근로빈곤,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만성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 등의 개혁이 요구된다. 더욱이 사회적 이전의 개선과 같은 이차적 분배의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실업/취업 경험의 변화,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수준에서의 개입 등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노력이 핵심적인 자살예방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자살률의 실질적인 감소가 가능할 것이다.

인구집단 건강의 관점은 보건학의 대표적인 관점으로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 정신보건계획(National Mental Health Policy)인 호주의 국가정신보건계획 또한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의 국가정신보건계획 프레임워크는 첫째, 생물학적, 경제적, 심리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결정요인들의 여러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신건강 및 질환을 바라본다. 즉,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 교육, 소득, 주거 그리고 고용 등의 결과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프레임워크는 생애주기 접근에 기반하여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특정 연령대의 특성에 따른 보다 유연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 서로 다른 필요의 수준 또는 위험의 수준의 차이에 기반한 타깃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며 양질의 개입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예컨대,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서 1차적으로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차적으로는 현재 정신건강의 문제 또는 질환이 생긴 인구집단 또는 이에 대한 위험이 높은 취약집단에 대한 개입을 제공하며, 3차적으로는 이전에 이를 경험한 집단의 필요에 기반한 개입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우리 연구는 일차적으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즉,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논의는 반복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결과 성차별적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관한 논의가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적 노동시장 문제 해결이 다양한 차원에서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즉 여성들의 돌봄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주희(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경우 ‘경제성장과 시장 효율의 관점’에서 접근되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정책에 한정’함으로써(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 촉진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를 고착화시켰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적 효과’를 가져오는 이외 일반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성차별적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노동시장 내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남녀에 동등한 기회제공을 위한 적극적 조치인 여성고용할당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표준고용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노동운동 및 단체 교섭 과정에서 여성들의 정치세력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돌봄의 노동과 유급노동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시민-노동자-돌봄인 모델(이주희, 2012) 도입이다. 이를 확장시키면 ‘돌봄윤리’에 기초한 돌봄국가의 제안(김희강, 2016)으로 이어질 수 있다<sup>5)</sup>. 먼저, 돌봄국가의 복지는 돌봄 문제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누구나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편, 제도의 마련과 관리의 책임은 정부에게 주어진다. 돌봄국가의 복지는 또한 ‘노동빈곤화’를 포함한 신사회적 위험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특히 돌봄국가는 생계부양자 뿐만 아니라 돌봄인을 시민으로 인정함으로써 남성주도적 사회보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이는 결국 경제위기 시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남성은 물론 여성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이들의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의 논의는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다. 즉, 기초 통계자료 비교를 통한 추론에 그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로운 통계분석을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 실증연구들이 축적해 온 근거를 종합하여 자살률이 급증하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별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다이내믹스(dynamics)를 젠더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 시론 연구이다. 따라서 향후 실증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차이와 이것의 젠더 차이에 대한 가설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자살의 원인으로 경제적인 요인에 주목함으로써 이 외에 자살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문제, 예컨대, 사회적 자본, 이혼,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이 유일한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제위기 시기에 주목하여, 해당 시기 증가하는 자살을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가 거시경제의 변화 또는 변동이라고 할 때, 해당 시기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의 원인은 경제적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시기에 주목함으로써 다른 시기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살률은 설명하지 않는다. 예컨대, 여성 노동인구 자살률의 급증은 두 번의 경제위기 시기는 물론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인다. 또한 카드대란 발생 직후인 2003-2004년과, 2005년-2006년 사이에는 자살률을 급격한 감소가 두드러진다. 특히 다른 두 시기 급증한 자살률의 위험양식으로 본 연구의 관점에서 카드대란 시기 이후 2003년 증가한 여성 실업과 자영업자의 몰락(박보영, 2010; 최병호, 2012), 그리고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예상 밖의 영향, 즉, 여성 비정규직 형태의 증가(장지연, 2006; 조준모와 김태희, 2008; 이근재, 2016)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추후 거시경제적 요인 이외 다른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위험요인에 관한 가설 설정과 함께, 실증적인 통계분석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은 인구집단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집단 평균 연구결과를 개인

5)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희강(2016)의 연구를 참고

차원에서 일반화하는 ‘생태학적 오류(The ecological fallacy)’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Schwartz (1994)가 논의하였듯이, 이것을 반드시 오류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본 연구는 자살을 개인의 행위로 파악하기 보다는 ‘사회적 사실’로 이해한다는 점, 그리고 자살위험의 인구집단 분포, 위험양식의 변화, 그리고 ‘젠더’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둔다는 점, 그리고 특히 개인의 자살행위를 설명하기 보다는 경제위기 증가하는 ‘자살률’이 주요 분석 대상이라는 점에서 생태학적 오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Schwartz, 1994). 본 연구의 관심은 다시 말해, 개인수준에서 논의될 수 없는 인구집단의 고유한 수준에서 분석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이 글에서 한국사회의 자살이 1997년에는 고용불안, 그리고 2008년에는 근로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여성에서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자살의 원인이 근본적이고 사회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적 방법이어야 한다. 자살은 ‘치유’보다는 ‘예방’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이 아닌 인구집단적 수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살의 사회적인 원인에 주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은정, 이수형(2014). 자살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다른 OECD 국가들과의 차이.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1). 45-56.
-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9-32.
- \_\_\_\_\_, 김안나, 박능후, 김은희, 유진연(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금재호(2001).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 노동 연구원.
- 김경혜(2009). 경제위기 시대의 사회안전망. 서울시연구. 10(3). 23-36.
- 김동현(2013). 우리나라 자살의 역학적 특성과 사회적 부담. 자살예방포럼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자살예방포럼 창립준비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미발간.
- 김명희(2012). 한국사회 자살현상과 [자살론]의 실재론적 해석. 경제와사회. 288-327.
- 김민영, 정광호, 금현섭(2011). 경제위기와 자살률 간 탐색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 273-302.
- 김안나(2006).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 26(1). 37-68.
- \_\_\_\_\_(2009). 외환위기 이후 여성빈곤의 실태와 빈곤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여성학. 25(3). 71-107.
- 김태완, 전지현(2009). 경제위기 이후 정책적 노력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 보건복지포럼. 150, 20-32.
- 김희강(2016).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정부학연구. 22(1). 5-30
- 노대명(2013). 근로빈곤층 실태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193. 1-8.
- \_\_\_\_\_, 이현주, 강신욱, 강은정, 전지현, 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 민현주, 임희정(2010).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고용변화 및 향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민서, 유영직(2013). 자살 예방정책의 형성과정과 과제. 지역발전연구. 12(2). 77-102.
- 박보영(2010).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시대의 빈곤문제. 노동연구. 19. 5-45
- 박영란, 정진주, 황정임, 권문일, 김창엽, 석재은, 엄규숙, 유태균, 정인숙, 황수경(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7-243.
- 박종순, 김순덕, 지선미, 이세숙(2003). 우리나라 자살률의 추세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25. 84-91.
- 배은경(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페미니즘 연구. 9(2). 39-82.
- 백인립, 김홍주(2014). 사회적 타살의 사회경제적 의미. 비판사회정책. (44). 326-360.

- 송인한(2018).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중요한 건 행동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02.14.).
- 신경아(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153-187.
- 안은별(2017). IMF 키즈의 생애. 서울: 코난북스
- 오은진, 김소연(2016). 청년층 여성의 경력단절. 사회과학논집. 47(2). 141-166
- 원시연(2011).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 유정미(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107-155.
- 윤우석(2011). 실업과 소득격차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152-185.
- 윤윤규(2010). 경기변동과 고용·근로시간 조정패턴의 변화. 황수경, 윤윤규, 조성재, 전병유, 박경로, 안주엽. 경제위기와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이근재(20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여성고용 효과. 한국경제통상학회. 34(2). 121-143.
- 이덕로(2004).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 연세경영연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41(1). 255-283.
- 이병희(2009). 일자리 위기와 근로빈곤. 보건복지포럼. 33-38.
- \_\_\_\_\_, 반정호(2008).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향. 2007년 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영(2015). 우리나라 자살예방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34-49.
- 이윤정, 송인한(2015). 자살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1). 58-82.
- 이정우(2009).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정치경제학. 황해문화. 18-38.
- 이주하(2017). 새로운 자영업과 갑을관계. 비판사회정책. 54. 355-372.
- 이주희(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월스톤크라프트 딜레마의 극복을 위한 대안. 한국여성학, 28(3). 35-62
- 이채정, 김상우(2013).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은기수(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 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2). 97-129.
- 장귀연(2009).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월간 복지동향. (134). 24-28.
- 장지연(2006). 글로벌 포커스 고용에서 적극적 조치의 적용과 그 효과. 국제노동브리프. 4(1). 1-21
- \_\_\_\_\_, 신동균(2010). 소득 양극화와 자살. 사회보장연구. 26(2). 1-21.
- 전병유(2010). 1997~98년 외환위기시의 고용·실업 정책 평가. 황수경, 윤윤규, 조성재, 전병유, 박경로, 안주엽. 경제위기와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정이환(2010). 비정규 노동과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 산업노동연구. 20(2). 41-62.
- 조순경(1998). 경제 위기와 여성 고용 정치. 한국여성학. 14(2). 5-33.

- 조준모, 권태희(2008). 한국 적극적 조치 제도의 성과 결정 요인.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차형석(2017).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를 돌아보다. 시사인.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668>
- 최병호(2012). 자영업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4
- 최선영, 장경섭(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남성생계부양자' 노동생애 불안정성의 가족 전이. 한국사회학. 46(2). 203-230.
- 최용환(2011). 자살의 사회경제적 진단. 이슈 & 진단. (3). 1-25.
- 최윤정, 박지연(2014). 생활고와 복지증진이 한국의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복지정책. 41(3). 155-182.
- 함우식(2013).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2(3). 375-402.
- 허찬국(2009). 1997년과 2008년 두 경제위기의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 Chang, S. S., Gunnell, D., Sterne, J. A., Lu, T. H. & Cheng, A. T. (2009). Was the economic crisis 1997-1998 responsible for rising suicide rates in East/Southeast Asia? A time-trend analysis for Japan, Hong Kong, South Korea, Taiwan, Singapore and Thai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68(7). 1322-1331.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7). Living for everyone LIFE: A framework for prevention fo suicide in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Canberra.
- Kickbusch, I. & Gleicher, D. (2010). Governance for health in the 21st centur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Norström, T. & Grönqvist, H. (2015). The Great Recession, unemployment and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9(2), 110-116.
- Rose, G. (2011). Sick individuals and sick popu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0(3). 427-432
- Safaei, J. (2015). Distributional orientation and health outcomes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5(4), 601-621.
- Schwartz, S. (1994). The fallacy of the ecological fallacy: the potential misuse of a concept and the consequen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5). 819-824.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531.
- SOPHIE (2015). Conclusions of the SOPHIE Project: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Matter for Health Equity. Barcelona, Agencia de Salut Publica de Barcelona.
- Stuckler, D., Basu, S., Suhrcke, M., Coutts, A., & McKee, M. (2009). The public health effect of economic crises and alternative policy responses in Europe: an empirical analysis. *The Lancet*, 374(9686), 315-323.

Williams, C., & Lapeyre, F.(2017). Dependent self-employment: Trends,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in the EU. ILO Employment Working Paper, 228.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World Health Organization.

Abstract

## Two Economic Crises, Unemployment, Working Poor, and Gender: Explaining the Dynamics of the Risk Patterns of Suicide in South Korea

Dasuel Moon\*·Haejoo Chung\*\*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gender-specific mechanisms of increased suicide rates during economic crises in South Korea. In order to address research aims, we focused on two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IMF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international recession in 2008. This study provides three main findings. First, different mechanisms increased suicide rates during the two economic crises. Particularly,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ised suicide rates during the 1997 IMF while the high level of working poor in the 2008 recession. Second, suicidal risk patterns for men and women differed at each period. The 1997 crisis which mostly affected full-time permanent workers had had relatively greater impacts on men suicide, whereas the 2008 crisis which affected precarious workers had done on women suicide. Finally, our finding indicated that these gender-specific risk patterns had been derived from the gendered labour market and male-friendly social policy. Placing women at the periphery of the labor market and using them as a buffer in times of crisis, governments failed to protect them from their economic difficulties. Suicide is fundamental and important public health and social probl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ocial determinants of suicide through gendered as well as population health perspectives.

**Key words:** Suicide rates, Economic crises, Unemployment, Working Poor, Gender

◆ 2018. 10. 31. 접수 / 2018. 12. 07. 1차수정 / 2018. 12. 19. 게재확정

\* MPH/PhD Candidate, BK21PLUS program in Embodiment: Health-Society Interacti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moon9123@korea.ac.kr)

\*\* Professor, BK21PLUS program in Embodiment: Health-Society Interacti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and School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College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hpolicy@korea.ac.kr)